

평준화 반대논리

중등학교 평준화를 폐지할 때가 왔다. (출처불명)

자유와 평등은 자유민주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원리이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상반된 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강조는 다른 쪽의 약화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즉,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평등의 실현이 어렵게 되고,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쉽게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정책에서도 이 두 원리가 균형을 유지했나 못했나 하는 것이 그 정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4반세기 전부터 우리 국민과 학생들은 학교 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해 왔다. 상급명문학교 입학에 위한 치열한 경쟁,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열 과외, 그 경쟁의 원인이 되는 학교간의 격차를 없애보겠다고 정부는 69년 중학교, 73년 고등학교 평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평준화 정책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컴퓨터(처음에는 은행알)에 의해서, 우연히 살게 된 주거지역 근처의 학교에 배정되어 왔다.

우리의 중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그 이름 그대로 평등의 원리를 강조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학교를 평등하게 만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계층적으로는 하류층 출신의 학생들, 성적으로는 열등생에게도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했다. 평준화 정책이 초등학생, 중학생들 간의 경쟁을 줄이고, 학교간의 격차를 상당히 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등의 원리가 가져다 준 이러한 이익보다는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보는 손해가 더 크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는 자유의 박탈감이 팽배하고, 학교는 획일화되어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없으며, 특히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다.

평준화 정책하에서 학교는 그들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에 상관없이 똑같은 학생들로 채워지게 마련이다. 이는 시장경제에서의 독점 경쟁, 획일화된 제도가 갖고 있는 약점은 몰락한 구 소련의 공산체제하에서 잘 볼 수 있다.

평등의 원리에 치우쳤던 우리의 중등학교 입학제도에서도 이제 자유의 원리에 비중을 두어 균형을 잡을 때가 되었다. 그러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극단적인 경쟁을 하게 하고, 이미 극에 달한 과외에 부채질을 하고, 1류, 3류 학교를 만들어내어 60년 대를 재현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람들은 평준화 이전의 입학제도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자세히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우수 학생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일류학교로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삼류학교로 진학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수학생이 삼류학교로 가지는 않는다. 열등생에게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삼류학교로의 길만이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수생에게도 열등생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위해서는 선택의 거리(OPTION)가 제공되어야 한다. 색깔, 디자인이 똑같은 옷들만이 있는 가게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단지 제조회사들만이 다른데, 유명회사의 것은 비싸다. 이때 손님의 선택은 그의 금전적인 능력에 완전히 달려있다. 유명회사의 것을 사고 싶지만 금전적이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사야한다. 그런데 만약 새로운 회사가 모양과 색상이 독특한 옷을 내놓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금전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이 새로운 옷을 기꺼이 선택할 것이다.

이 옷가게처럼 우리나라의 중등학교들은 모두 똑같다. 수업과정, 방법, 심지어 진도까지 모두 같다. 단지 다르다면 역사나 지명도, 명문대학에 입학시키는 졸업생들의 숫자정도이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선호의 기준이 되어왔다. 평준화 정책의 개선은 색다른 옷을 만들 듯이, 학교들로 하여금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해서, 학생들에게 선택의 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 케임브리지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한된 선택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다.

평등의 원리가 학교를 휩쓴 것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 대 이전까지는 백인과 흑인은 각기 다른 학교에 다녀야만 했다. 끈질긴 흑인 민권운동의 결실은 이것이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 모든 학교는 인종통합작업을 명령받았다. 우리나라의 평준화정책과 똑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배정하게 되었다. 법에 의한 물리적인 통합이 자동적으로 화학적인 통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인종이 섞인 학교에서는 인종간의 반목, 갈등이 증폭되고, 폭력이 빈번했으며, 교육보다는 질서를 잡는데 더 노력을 해야할 정도였다. 전체 학생들의 성적은 계속 하락했고, 백인들은 흑인이 없는 교외지역의 소위 "좋은 학교"로 탈출을 하기도 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케임브리지시는 모든 학교(초,중,고등학교)를 특성화해서 독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했다. 각 학교는 공통교과과정외에 외국어, 컴퓨터,과학, 예술등에 강조점을 두거나, 교육방법을 달리하게 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등을 만든 것과 같다.

학생들은 자기 교육구안에 있는 학교중에서 3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을 배정하는 컴퓨터는 학생들의 희망을 맞추면서 동시에 각 학교가 인종, 성적, 사

회 계층이 균형을 이루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자유를 주면서 평준화 작업도 한 셈이다.

시 교육위는 학교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인기가 없는 학교에는 금전적, 기술적 지원을 했다. 진학정보센터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을 도왔다.

이 제도의 시행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학부모, 학생, 교사들의 만족도가 급격히 올랐으며, 학교에 대한 애착심이 증가했고,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올랐다. 교외로 탈출했던 학생들도 돌아왔다. 선택의 자유가 만들어 내는 신비한 힘에 모두 놀랐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학자들은 이 제도가 선택의 자유와 모든 국민에게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 사회의 의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춘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눈앞에 다가온 21세기는 지식사회이다. 지식사회에서는 자본이 아니라, 지식이 이윤을 창출해 낸다. 그러기에 교육기관이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평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우리의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을 강조해야 하는 이러한 시대적 추이에 맞지 않는다. 그러기에 자유와 평등, 이 두 원리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시급하다.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이미 허물어지고 있고 정부는 그것을 촉진해야 한다

이슈투데이 2000년 6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중이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과학 고등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와 각지역의 대안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잘 나타낸다.

이것은 고등학교 교육을 공급하는 자와 수요하는 자의 양쪽에서 일어난 변화의 결과이다. 일상 생활을 돌아보자. 오늘날의 10대는 그들의 일상 생활에서 모든 것을 선택해서 소비하고 있다. 먹을 거리, 입을 거리, 지식을 얻을 거리 등 모든 것에서 그러하다. 정해진 것을 또는 사준 것을 소비해야 했던 기성세대의 성장기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다.

소비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삶의 방법에서도 그러하다. 그들은 훨씬 넓은 것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다. 엘리트가 되어 사회적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고, 보통사람으로 살며 아름다운 가정을 가지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다. 장래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질 때 너도나도 사회의 엘리트 직업을 들먹였던 옛날과는 너무나 다르다. 그 때는 대학의 학과까지도 부모의 판단에 따랐다. 이러한 변화가 대안학교를 낳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일류 교향악단의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9세부터 바이올린을 연습해야 한다고 한다. 그보다 뛰어난 독립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7세부터는 연습해야 한다고 한다. 독창성을 가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더 빠른 시기부터 그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범세계적 경쟁에 완전히 노출된 한국사회는 점점 더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고, 이것이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증가시키고 있다.

학생들이 개성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려 하는, 그리고 사회가 전문가를 양성하려 하는, 위에서 든 두 가지의 변화가 올바른 변화라면, 사회의 변화가 불합리한 제도를 허물어뜨릴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전자 상거래를 예로 들어보자. 전자 상거래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제도가 필요하다. 상품 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가,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것들이다. 이러한 제도는 교환 행위가 반복되는 가운데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정부가 만들 수도 있지만, 전자 상거래가 유통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익히 알듯이 사회의 행위는 제도의 위에서 발달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입시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가 평준화 제도를 허물어 뜨리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면 정부는 그것을 촉진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가 발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고등학교가 탄생하여 10대가 자신의 개성에 따라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교실이 무너지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엘리트의 양성을 지향하는 고등학교가 탄생하면 국가 엘리트와 전문가의 부족이 크게 경감될 것이다. 다른 편에서의 부작용은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부작용이 이익보다 적기 때문이다.

♣ 고교평준화는 국력낭비

(조선일보 11월14일자 시론)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각 대학이 현 중3생에 적용되는 2002학년도 입시요강을 발표했다. 그런데 선발 방법의 비중이 수능시험에서 무시험으로 옮겨져 고교간 학력 차이를 인정할지의 문제가 교육부, 대학, 고교, 학부모들 간에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필자는 중학교 입학시험을 치렀다. 그때는 '국민학교' 4학년이 되면 많은 집에서 과외를 시켰고, 완전 타의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했다. 그러나 69년부터 제비뽑기로 중학교가 평준화해 '교과 과외'는 사라지고, '특기 과외'가 생겨났다. 그 덕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공부만 하는 생활에서 벗어나 악기 하나씩은 다룰 줄 아는 생활을 누리게 됐다.

언제부터인가 몇몇 고교가 다시 신흥 일류 고교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평준화 지역의 고교들이 대학입시에서 크게 부상하고,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초일류 고교로 알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고교간 학력 차이가 커졌다. 어떤 고교는 수능성적 평균이 3백70점이고, 다른 고교는 이보다 무려 2백여점이나 낮다. 수능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수능 평균이 3백70점인 학교의 학생들은 쓸데없는 암기에 시간을 낭비했으며, 뒤 처진 학교의 학생들은 너무도 어려운 문제를 '찍기'에 바빴을 것이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많은 특수목적고 학생들이 자퇴했고, 우수한 학생들이 이들 학교로의 진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평준화 지역으로 바뀌기를 희망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들 일류 고교들을 해체, 평준화시키는 것은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한다. 예전 일류 고교 출신들이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를 이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과 잠재력을 갖춘 영재가 같이 모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적성과 자질을 살리고 잠재력을 발휘하게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교육만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에서 영재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고, 비영재 학생들의 학력도 향상시키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때 영재의 자질과 잠재력을 사장시키고 경쟁 의욕을 저하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면 차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어떤 형태든 학생의 노력과 자질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금년 수능은 더 쉽게 출제할 방침이라니 수능을 통한 높은 수준의 능력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수능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다. 따라서 이제는 각 대학에 실질적인 재량을 줘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하고, 간접적으로 고교 차이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야 한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 전국 단위의 고교학력평가고사 도입이

건의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대학 특유의 본고사를 부활하는 것이다. 모두 무시협제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많은 대학이 고유의 학력경시대회를 치르고 있다. 이를 종래의 국-영-수 중심의 시험이 아닌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시험으로 발전시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한 다양한 능력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 도입되든지, 다양한 '과외'를 몰고 올 것이다. 그러나 도가 넘치는 과열과외 문제는 교육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다. 사교육비 절감은 즉각적 과외가 쓸모없음을 이해시키고, 올바르게 벌여 올바르게 쓰는 사회풍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야지 교육 자체의 목적과 지향점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풀어서는 안된다.

高校평준화 이제 깨자 !

<조선일보 사설에서>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난 26년간 지리하게 이어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진부하다. 평준화의 공과는 이미 판가름이 났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학교교육의 붕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야기는 간단하다. 바로 평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교육현장의 이런저런 참담한 실정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평준화로 인해 무너진 학교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인지 개선책 마련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정부는 그 동안 평준화를 깰 경우 예상되는 입시과열 등 혼란과 부작용을 우려해 지엽적인 보완책 마련에 그쳐왔다. 영재교육의 길을 터주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예·체능고교를 신설하고 평준화 지역 고교들에 대해 이른바 '수준별 교육'을 실시토록 독려했던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하향평준화의 물살을 제어하기에는 어렵도 없었다. 수준별 교육이니, 적성·특기교육이라는 것도 말이 쉽지만 여건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여건의 개선은커녕 교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려 선생따로, 학생따로의 한심한 교육현실을 낳았다.

정부는 학교교육 붕괴와 더불어 과외열풍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자, 또다

시 획기적인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원들 사기를 높이고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내용이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감하게 평준화를 깨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본다. 한꺼번에 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립형 사립고교를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옹호론자들은 이를 허물 경우 입시열풍이 더욱 극심해지고 과외도 더불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교입시가 부활되면 그에 따른 경쟁을 불가피할 것이나 대학입시가 더 과열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경쟁의 분산으로 그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과외 극성론은 허구다. 평준화를 깨면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공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오히려 과외수요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과외열풍이 고교 평준화 이후 극심해진 과거경험을 떠올려보면 간단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주간조선 99. 12. 2

[기고] 저절로 크는 영재는 없다

(조석희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총괄팀장)

뛰어난 교사·특별 교육프로그램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접어들며 세계 각국은 선진국 도약을 위한 두뇌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마디로 국가 두뇌경쟁에 대응할 고급 두뇌양성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1970년대부터 영재교육에 열을 올려온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거꾸로 모든 아동을 똑같이 취급하여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그 이후 평준화 정책은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지만, 일반인들의 의식과 교육체제 속에는 아직도 평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창의성, 사고력에서 하향 평준화만을 낳았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학생들의 능력, 적성, 소질에서의 개인차 현상이 무시되는 획일적 수업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학교 풍토와 제도로 인하여 영재들은 빠른 학습 속도, 넓은 흥미 영역, 그리고 특정 분야의 주제에

깊이 있게 몰두하는 능력을 갖고도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 오히려 재능을 드러내기보다는 숨겨야 하고, 지적 욕구를 추구하기보다는 억제해야 하는 것이 영재들의 슬픈 현실이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재의 열악한 교육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영재들은 학습 부진아로 전락하고 있다. 영재성이 뛰어난수록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적 처방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신동이라 해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잘 하는 것은 아니다. 책을 술술 읽고,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대던 신동이 어른이 되어서는 이름없이 초야에 묻힐 수 있고,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연금으로 하루 하루를 연명하는 생보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영재들은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잘하게 되리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인하여 영재들을 위한 특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 아동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가치 창출 가능성은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때에만 발휘될 수 있다.

신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케 하기 위한 대안은 영재교육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영재들만 특별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아동이 각자의 적성, 특성, 소질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재들도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학고등학교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영재교육 체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영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뛰어난 학생, 뛰어난 교사,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의 세 요소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서 고도의 정보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고급두뇌 인력을 배출하는 데 필요한 획기적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영재교육을 실시하지 않고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소프뱅크 손정의 같은 지식시대의 리더는 나오지 않는다.

과학 장벽, 정보장벽을 넘어 새로운 기술과 이론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길은 최고급 두뇌들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제 물건만 만들어 파는 시대는 지났다. 수출 잘 하려면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하고 영재육성이 그 토대를 이뤄야 한다. 치열해진 국제경쟁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급 두뇌 인력을 배출하는 영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